

DOING GOOD INDEX 2020

Profiling Asia's Social Sectors: The Path Forward



Centre for Asian Philanthropy and Society

doing **GOOD**



목차

3	개요 발췌문
6	정부 규제
8	세금 및 재정 정책
10	공익 생태계
12	정부조달
14	한국
19	미주

개요 발췌문

미국의 총 기부금액은 국내총생산(GDP)의 2%인데, 아시아 각국에서 이와 동일한 규모로 기부가 이루어진다면 **연간 5,870억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이 된다.^{1,2} 이는 아시아로 들어오는 **해외원조의 12배**,^{3,4,5} 유엔의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 부담해야 하는 1.5조 달러의 약 40%에 달한다.⁶

그러나 아시아는 각국 내 소셜섹터에 대한 신뢰 부족, 기부를 독려하거나 민간자원을 전략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족으로 인해 필란트로피 분야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다.^{1,7} *Doing Good Index (이하 DGI)*는 지속해서 이러한 상황을 추적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DGI는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민간자원을 둘러싼 환경에 관한 조사이다. 본 조사는 소셜섹터에서 개인과 기관의 임시방편적인 기부를 넘어,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투자를 견인하는데 필요한 주요 요인들을 소개한다. 데이터에 기반한 통찰로 필란트로피, 임팩트 투자 및 그 외 민간사회투자 등을 촉진하기 위한 더욱 강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법을 모색해, 궁극적으로는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아시아를 만들기 위한 여정을 그려내고자 한다.⁸

종합 결과

첫 조사인 DGI 2018은 아시아 전반의 민간사회투자를 활성화하거나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DGI 2020**에서는 3개 국가가 더 합류하여 총 18개국이 참여했다: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네팔,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타이완, 태국, 베트남.^{iii,iv} DGI는 총 2,189개의 사회공익단체 (이하 SDO)에 대한 설문조사와 145명의 전문가 인터뷰로 이뤄졌다.^v

아시아에서 정부(의 역할)는 매우 중요하다 — 그리고 정부는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는 증가하는 부(富)와 가처분소득(정부가 독자적으로는

충족시킬 수 없는)을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사용할 방법에 대하여 고심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기부금 유입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자국의 기부금이 합법적인 SDO로만 유입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규제를 통한 감시를 강화시키고 있다. 2018년도 조사에 참여했던 국가의 절반이 2020년 '정부규제(regulations)' 분야에서 결과가 더욱 악화되었다. 이는 민간사회투자가 순환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해외 기부금에 대한 규제가 있는 6개국(방글라데시, 중국, 인도, 네팔, 파키스탄, 베트남)의 SDO 대부분은 기부금이 20% 이상 감소했고 그로 인해 필요한 사회서비스의 전달을 줄이고 있다.

세금 및 재정 정책은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세금혜택(tax incentive)은 기부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아시아에서는 개인기부자나 기업이 정부와 협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세금혜택은 정부가 기부를 지지하는 수단으로 그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다.

하지만 세금혜택의 종류와 신청방법은 전문가도 혼란스러워한다. 세금혜택은 강력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함이 부족해 그 효과가 떨어진다.

정부조달(procurement)은 아쉬움이 있다.

정부조달은 소셜섹터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성장을 끌어낼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보다 감소했다. 2년 전 조사한 15개국 중 11개국에서 정부조달이 감소했다.

SDO와 정부의 협의는 증가하고 있다.

2020년 조사에서는 SDO 중 3/4이 정책협의에 관여하고 있다고 답하여 1/2이었던 2018년보다 증가했다. 이러한 흐름은 다양한 참가자가 의견을 내고 더 이해하기 쉬운 실질적인 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아시아 전역에서 규제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증가추세는 더욱 중요하다.

기업사회공헌(CSR)과 공익을 위한 파트너십은 탄력을 받고 있다. 18개국 중 11개국에서 CSR과 민간 파트너십에 대한 새로운



전력의 승수효과를 내는 DGI

¹ 본 보고서에서 '소셜섹터'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원을 요청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개인, 기업, 단체를 의미한다.

² 어떤 사업이나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수익창출과 동시에 사회와 환경 문제 해결도 고려한 투자방식을 의미한다.

³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네팔이 DGI 2020에 새로 합류했다.

⁴ "홍콩", "대만", "한국"은 홍콩특별행정구, 중화민국, 대한민국을 의미한다.

⁵ 사회공익단체(Social Delivery Organization, SDO): Doing Good Index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사회의 필요에 물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을 의미한다(비영리단체, 사회복지단체, 사회적기업을 아우르되 정부지원금이 100%인 곳은 제외한다).

관심이 생기고 있다고 답했다. 오늘날의 문제들은 복합적이다. 복합적인 문제를 의미 있게 다루려면 민간, 공공, 시민 부문 전반에 걸친 협업이 필요하다.

분야별 결과

DGI가 범아시아적인 교훈을 준다면, 분야별 결과는 국가별로 필란트로피 촉진과 소셜섹터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다음 장에 세부적으로 정리한 각 분야 결과가 나온다.

결론

전 세계적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위기 때문에, 2020년은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불러왔다. 이런 변화에 대한 시민, 조직, 정부의 대응에 따라 미래의 가능성은 달라질 것이다. 증거기반(evidence-based)연구인 DGI가 이 중요한 시기에 통찰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시아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갈 길이 여전히 멀고, 어렵게 진척된 것들은 사회적/ 환경적 도전으로 위협받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도전을 끊임없이 충족시킬 수 있는 자원도 가지고 있다. 우리는 현재 보건 위기에 맞서 싸우고 있는 아시아의 독창성과 사회적 혁신을 목격하고 있다. 또한 소셜섹터, 민간섹터, 정부가 현 상황을 함께 이겨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

위기가 진정되면 세상은 달라져 있을 것이다. 재건하는 과정에 소셜섹터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변화 속에서 소셜섹터의 복잡성과 중요도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이 섹터와 관련된 정책을 더 고심할 수도 있다. *DGI 2020*은 아시아국가의 학습곡선을 향상시키기 위해 아시아 전역의 모범사례를 조명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아시아국가들이 발전을 공유하고, 보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건설할 방법에 대한 시의적절한 로드맵을 제공하는데 DGI가 주요한 정책 도구로 사용되길 바란다.



정부 규제

정부 규제 분야는 사회 투자의 용이성을 측정하기 위해 필란트로피 활동과 관련된 법과 정책을 평가한다.

주요 결과

SDO 설립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쉬운 국가가 있다. 1-2개의 승인만 받으면 되는 국가가 있는 반면 9개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국가가 있다. 승인 기간은 일주일 미만에서 길게는 1년까지 걸린다.

해외 기부금이 줄면서 자원에 공백이 생기고 있다. 특히 해외 기부금이 SDO의 중요한 수입원이 되는 중저소득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6개국이 외화 유입의 제한으로 해외 기부금이 감소될 전망이고, 4개국은 GDP 상승과 동시에 해외 기부금이 감소하고 있다.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책무성을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18개국 중 15개국에서 연차보고서와 연간 회계감사가 의무화 되어있지만, 그 기록은 대부분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모든 국가에서 이사 또는 고위급 간부는 단체의 활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

법이 일관되게 집행되고 있지 않다. 설문에 참여한 SDO 중 법이 대체로 집행되고 있다고 믿는 단체는 절반을 조금 넘는다. 법과 규제의 시행이 효과가 있다고 보는 국가일수록 SDO가 사업 중 법을 우회할 가능성이 작다.

소셜섹터에 관한 법과 규제는 이해하기 어렵다. 많은 SDO가 복잡한 법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규제 내용의 변경사항은 더욱 따라가기 어려워한다.

정부는 소셜섹터를 정책 협의과정에 더 참여시키고 있다. SDO의 약 1/3이 정책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싱가포르와 스리랑카가 이 분야에서 가장 우수하고 대만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은 보다 효율적인 행정, 원활한 기금의 흐름 그리고 상대적으로 간단한 규제로 SDO와 기부자들이 선행 (do good)을 하기가 더 수월하다. 3개국 모두 SDO 설립을 위한 단일 창구가 있다. 스리랑카는 1개의 승인만 받도록 하고 있고 그 절차가 거의 무료로 이뤄진다.

중국, 네덜, 베트남은 뒤처져 있다. 저해하는 요인은 3가지다. 먼저, 부담스러운 등록 절차. 중국의 SDO는 9개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전체 과정이 100일 정도 걸린다. 두 번째로, 약한 책무성 체계로, 베트남에서는 이사회나 고위급 간부가 소속 단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다. 마지막으로, 기금의 흐름이다. 3개국 모두 해외 기부금에 제약을 두고 있고 네덜에서는 국내 모금에도 제약이 있다.

주요 지표

효율성

- 등록을 위해 받아야 하는 승인 횟수
- 승인 소요시간
- 단일창구 존재여부

기금의 흐름

- 해외 기부금 수령을 위한 승인 횟수
- 해외 기부금 승인 소요시간
- 해외 기부금 한도
- 기금의 흐름을 저해하는 요인들

책무성

- 보고를 위한 의무사항 개수
- 이사회의 법적 책임 유무
- 고위급 간부의 법적 책임 유무
- 규제의 집행 여부

소통

- 법의 접근성
- 법이 이해하기 쉬움
- 정책수립 과정에 참여

17/18^{vi} 공개된 법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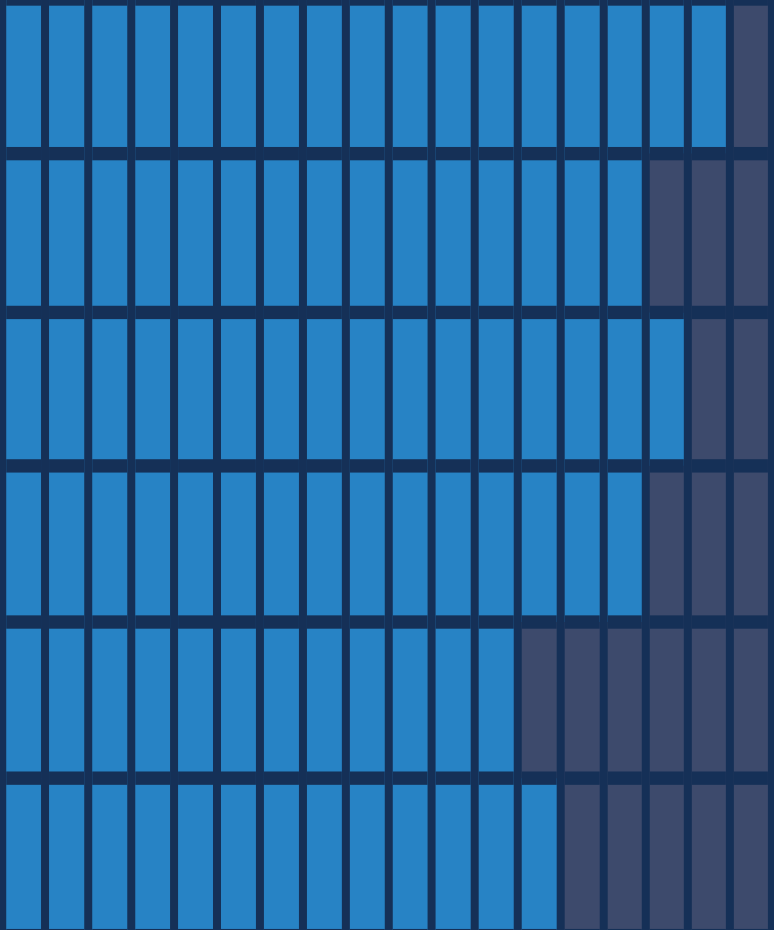
15/18 SDO를 등록하기 위한 승인
횟수 4개 이하임

16/18 이사 또는 고위급 간부가 법적
책임 있음

15/18 연차보고서 공개 의무 있음

12/18 해외 기부금을 받는데 제약
없음

13/18 국내 모금에 특별한 제약 없음



42%

관련법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 ^{vii}

55%

정부가 비영리단체에 법을
집행한다고 응답

^{vi} 설문한 국가 18개국 중 각 항목에 해당되는 국가의 수.

^{vii} 설문한 SDO 중 각 항목에 해당된다고 응답한 SDO의 비율.

세금 및 재정 정책

세금 및 재정 정책 분야는 기부자와 수혜자에게 주는 재정적 혜택을 다룬다.

주요 결과

2018년과 마찬가지로 세금 및 재정 정책 분야는 DGI의 전반적 성과를 반영한다.

기부자와 기부대상을 위한 세금혜택이 이 분야의 성과를 나타낸다. 2개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가 개인과 기업에 소득공제(tax deduction)를 해준다.^{viii} 1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비영리단체에 세금면제(tax exemption)를 해준다.

소득공제율은 국가마다 편차가 커 0%에서 250%까지 있다. 14개국이 100% 또는 그 이상의 공제를 해준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수입에는 한도가 있다. 16개국에서 소득공제를 수입 또는 수익의 일부로 제한한다.

유산기부 형태의 사망 이후 기부에 부여되는 혜택은 부족하다. 상속세가 있는 국가가 6개에 불과하고 이 중 4개국이 유산기부에 대한 혜택이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는 SDO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한다. 설문 참여한 SDO 중 약 1/3이 정부보조금을 받는다고 답했지만, 이는 단체 평균 예산의 8%에 불과하다.

일본, 싱가포르, 대만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왔다. 이유는 기부에 대한 호의적인 세금혜택 그리고 공제를 위해 요구하는 조건이 간단하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의 개인 및 기업 소득공제율은 250%로 아시아에서 비할 곳이 없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그럴 것이다. 대만과 일본은 유산기부에 대한 혜택이 있어 높은 성적을 거뒀다.

캄보디아, 네팔, 스리랑카는 반대이다. 캄보디아는 개인기부에 대한 공제가 전혀 없고 네팔은 기업기부에 대한 세금혜택이 없다. 스리랑카는 SDO가 세금면제를 못 받는 유일한 국가이다. 3개국 모두 세금면제를 받기가 가장 어려운 국가에 속한다.

주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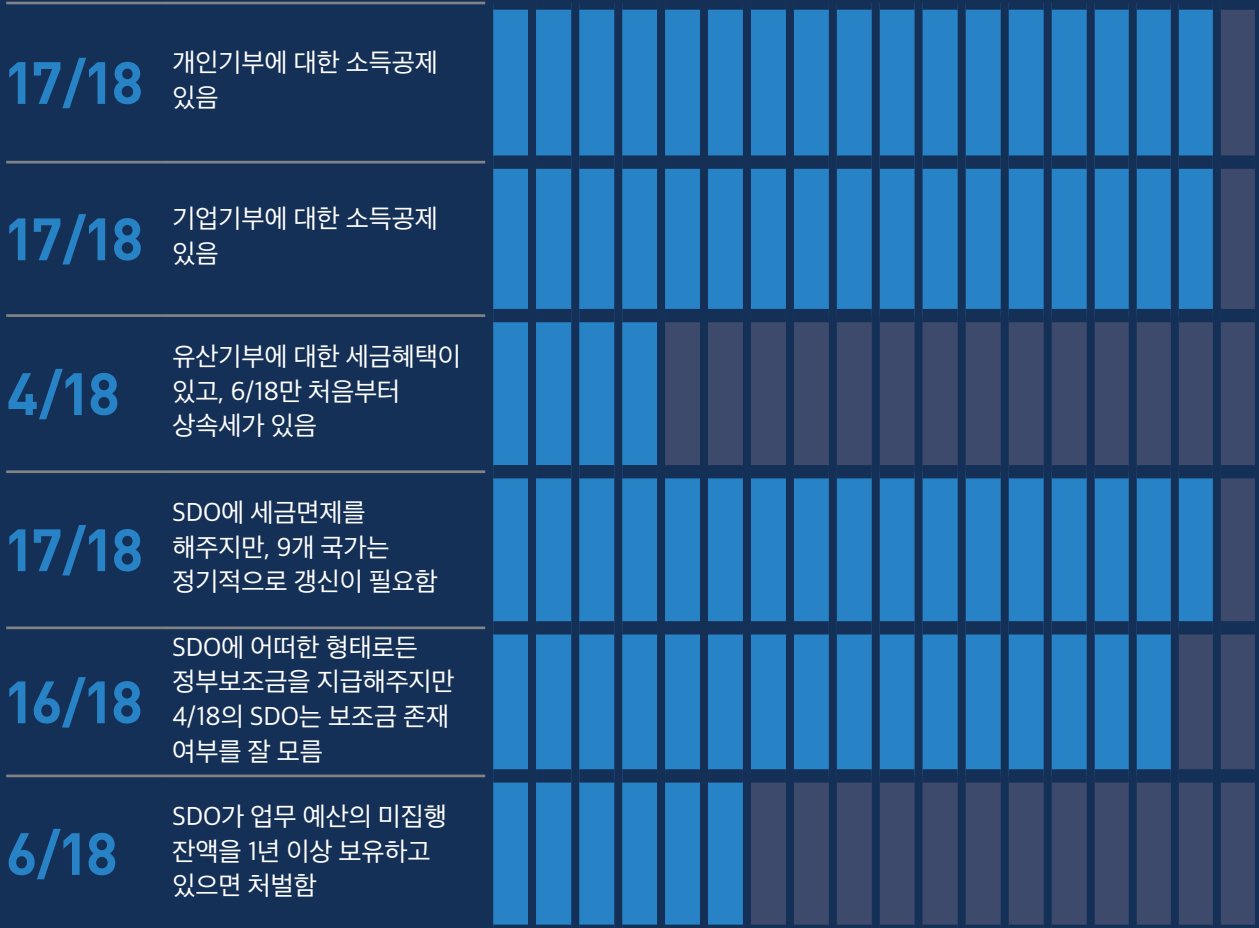
기부자를 위한 혜택

- 개인 및 기업 소득공제율
- 소득공제 한도
- 소득공제 요청이 수월함
- 유산기부에 대한 세금혜택
- 기업기부 의무화

기부대상을 위한 혜택

- SDO를 위한 세금면제
- 정부보조금 수령 가능성
- 미사용 잉여금에 대한 처벌

^{viii} 한국의 경우 세액공제(소득공제와 세제혜택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가 더 정확한 표현이다.



공익 생태계

생태계 분야는 소셜섹터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제도적 연대를 다루고 있다.

주요 결과

사회는 지속해서 소셜섹터를 지원하고 있다. 결과는 2018년과 유사하게 다양한 기관과 일반 대중이 SDO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인정하고 후원하는 것으로 나왔다. 여러 기관 간의 결집은 여전히 약하지만 아시아에서 파트너십이 형성되고 있는 사례들이 보여 고무적이다.

아시아에서 SDO에 대한 대중의 시선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하지만 기부를 저해하는 스캔들 때문에 소셜섹터에 대한 기부자들의 신뢰도는 여전히 낮다.

개인은 기부를 통해 소셜섹터에 참여하지만 충분하진 않다. 개인기부가 가장 보편적인 기부방식이지만 설문에 응한 SDO의 2/3는 개인 기부 수준이 낮다고 응답했다.

공익활동은 널리 인정받고 있다. 모든 응답국이 필란트로피에 대한 상을 수여하고, 3개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SDO와 CSR에 대한 상을 수여하고 있다. 전국 단위 자원봉사의 날은 보편화 되고 있지만, 기부의 날은 좀 더 자리 잡을 필요가 있다.

숙련된 직원을 모집하고 유지하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SDO의 80%가 직원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요 이유는 SDO 직원은 동급의 영리 섹터 직원보다 임금이 낮아야 한다는 인식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원봉사는 폭넓게 이뤄지고 있지만, 봉사자를 구하기는 어렵다. SDO의 84%가 자원봉사자와 함께 일하고 있지만 그중 절반은 이들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SDO를 위한 거버넌스 인프라는 거의 모든 곳에 마련되었다. 18개국 중 15개국이 이사회를 의무화하고 있다. 대부분의 SDO(87%)에 이사회가 있고 거의 모든 이사회가 정기적으로 모인다. 이사회 1/4이 여성이다.

아시아에서 선행을 하는 새로운 방법들이 탄력을 받고 있다. SDO의 약 60%가 앞으로 크라우드펀딩을 할 의향이 있다. 설문대상 단체 중 절반이 자국에 사회적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고 답했고, 거의 모든 단체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부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답했다.

생태계 분야에서 높은 결과를 얻은 국가는 네팔, 필리핀, 싱가포르다. 소셜섹터에 대한 높은 신뢰, 활발한 사회적/기업적 참여, 그리고 자원봉사와 이사회 참여로 인해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네팔은 비영리단체 직원이 영리 직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일반적이지 않은 2개국 중 하나이다.

부진한 성과는 낮은 신뢰도와 부족한 사회참여 때문이다. 미얀마는 대부분 지표에서 낮은 성적을 얻었고 일본과 한국은 신뢰도, 기업 참여 그리고 비영리단체 직원은 임금이 낮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낮은 결과를 얻었다.

주요 지표

대중의 시선

- SDO에 대한 신뢰도
- 대중에 알려진 스캔들
- 개인기부 수준

제도적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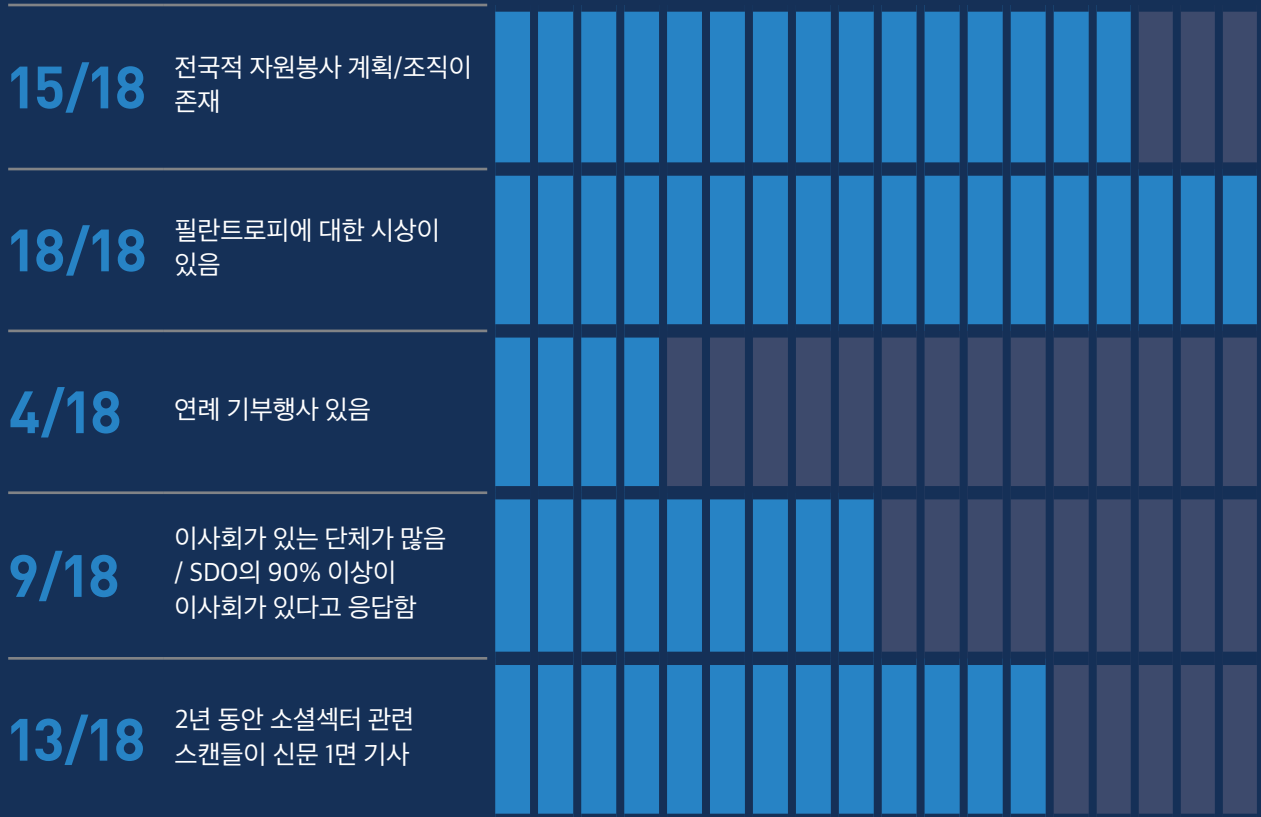
- 필란트로피, SDO, CSR을 위한 시상
- 기부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위한 국가 제정일

인재 인프라

- 직원과 자원봉사자 고용
-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 비영리섹터 그리고/또는 필란트로피를 위한 대학교육 과정
- 임금격차

바람직한 거버넌스

- 이사회 1인 1표의 존재여부와 그 구성원
- 이사회 내 기업 관계자 유무
- 이사회 내 정부 관계자 유무
- 엘리트층과의 연계



정부조달

조달 분야는 소셜섹터에 대한 정부조달의 유무와 절차를 다룬다.

주요 결과

아시아 국가 중 SDO를 통해 조달사업을 진행하는 정부는 26%로 2018년보다 낮다.

조달 절차는 발전할 여지가 있다. 정부와 계약한 SDO의 61%는 조달에 대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대부분은 조달 절차에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본다.

성적이 높은 국가에도 조달 분야는 아쉬움이 있다. DGI에서 전반적으로 성적이 좋은 국가들이 조달에서의 잠재력을 아직 발휘하지 못했다. 두앙웰(Doing Well)에 속한 싱가포르와 대만은 조달 분야에서는 높은 성과를 얻지 못했다.

한국, 파키스탄, 베트남이 높은 성과를 냈다. 정부와 계약을 추진하는데 혜택이 있으며, 신청절차는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하고 투명하다. 파키스탄의 성과가 두드러진다--2018년 하위 3위였으나, 2020년에는 상위 3위에 들었다. 상대적으로 투명한 신청 절차와 정부조달 담당기관의 헌신으로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낮은 성과는 혜택의 부재와 투명성 부족 때문이다. 캄보디아, 미얀마, 스리랑카 모두 SDO가 조달에 참여하는데 혜택을 주지 않으며 신청절차도 가장 어렵고 불투명하다. 캄보디아와 미얀마는 유일하게 조달을 신청하는 중앙 플랫폼이 없는 국가이다.

조달사업 진행절차

조달사업 참여의 기회 접근성

- 조달사업 참여 자격
- SDO에 특화된 혜택

조달사업 진행절차

- 정보 접근성, 투명성, 절차의 편의성

16/18

조달사업 참여를 위한 중앙
또는 정부 플랫폼이 있음



26%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부와
계약한 적 있음

39%

조달 기회를 위한 정보를 얻기가
쉬웠다고 응답(정부와 계약을 한
단체 중)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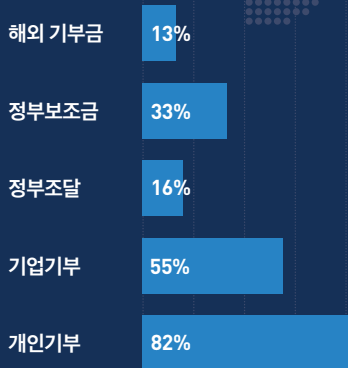
승인절차가 투명하지 않다 또는
어느 정도 투명하다고 응답(정부와
계약을 한 단체 중)

76%

승인 절차가 어렵다고 응답(정부와
계약을 한 단체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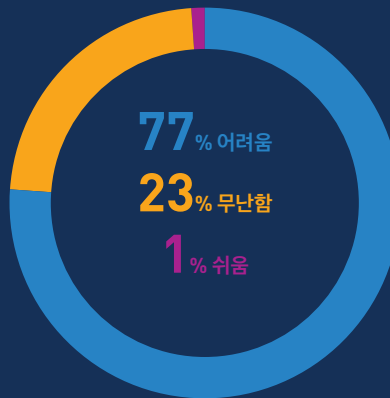


재정 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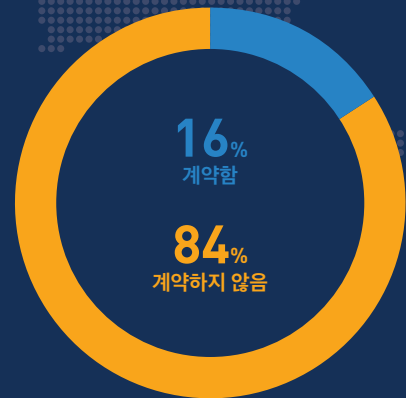


*각 재정을 받는 SDO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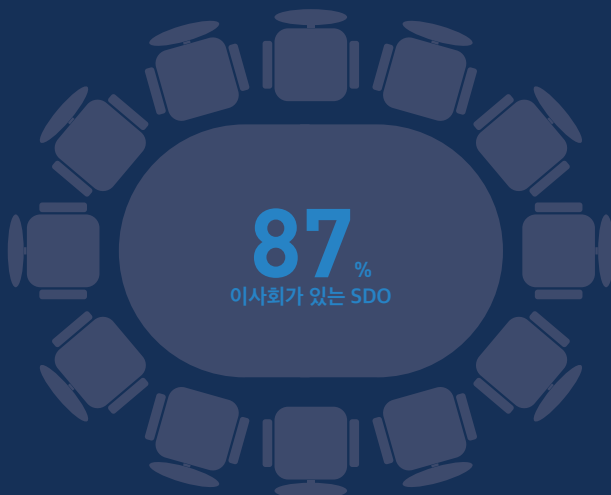
법의 이해도



정부조달계약이 있는 SDO 비율



SDO에 대한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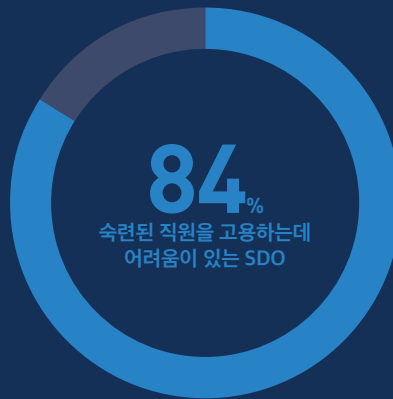
SDO 이사회 구성원



기업 자원봉사자와 함께 일하는 SDO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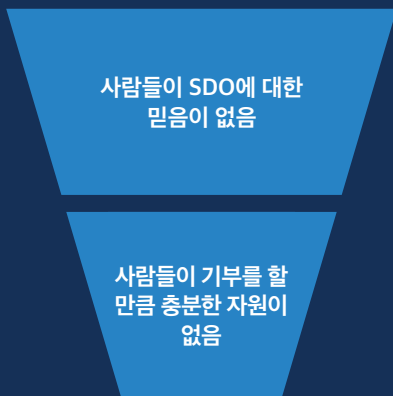
숙련된 직원을 고용하는 어려움



개인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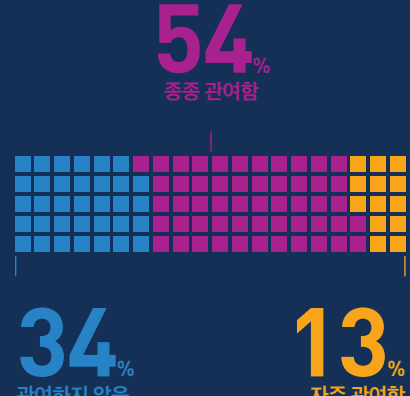
개인기부가 낮은 2가지 주요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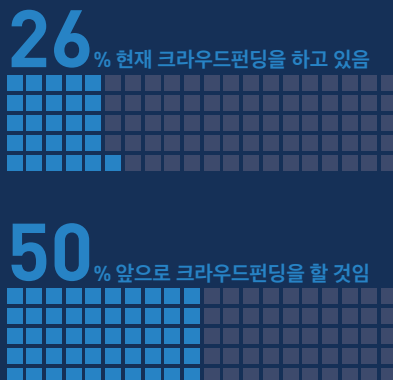
엘리트층과 친분이 있는 S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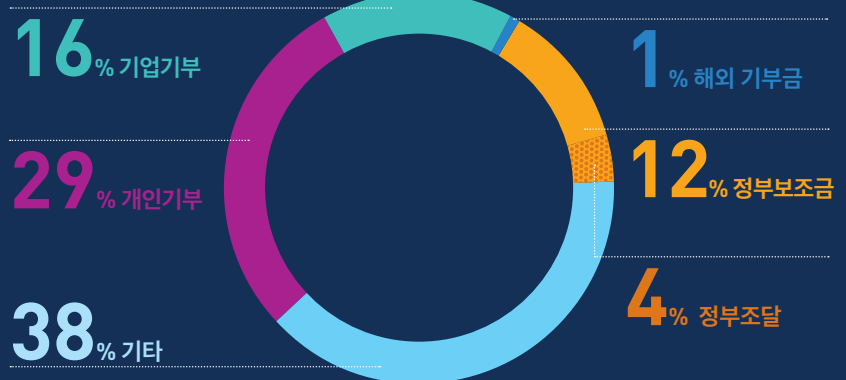
정책협약에 관여하는 SDO



크라우드펀딩



재정 출처에 따른 평균 SDO 예산*



*본 자료는 데이터를 수집할 당시 마지막 금융 사이클이 마무리된 2017-2018년 데이터를 토대로 작성했다.



요약: 비영리 섹터 내 대규모 스캔들 폭로, 새로운 기부방법(온라인)에 대한 관심,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사회조직(사회적 기업)이 기존 기부자와 비정부기구(NGO)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정부도 사회적 기업과 일자리 창출로 관심을 돌리면서 소셜섹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이러한 어려움을 증폭시키고 있다.

DGI 2018: 두잉베터(Doing Better)

DGI 2020: 두잉베터(Doing Better)

인구통계학적 정보¹

총 인구 (2018): 51,606,630

1인당 국내총생산(GDP), 구매력평가(PPP) (2018): \$40,111.80

비영리단체 수 (2018, 100 단위에서 올림): 33,600²

비영리단체 대비 인구 비율: 약 1,535명 당 1개

GDP 대비 보건 분야 지출 비율 (2017): 4.66%

GDP 대비 교육 분야 지출 비율 (2016): 4.6%

소득 상태 (세계은행 기준): 고소득

연 GDP 성장률 (2018): 2.7%

인간개발지수 순위 (2019): 22위

한국은 수십 년의 놀라운 경제성장으로 1990년에 8,276달러였던 1인당 GDP가 2017년에 38,335달러로 증가하는 주요산업국이 되었다.³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경제성장은 감소하는 대신 불평등은 증가했다. 한국은 커지는 실업률, 지속되는 성(性) 불평등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국가이다. 전체 노인 중 약 절반이 빈곤층으로 국제평균 13%보다 훨씬 높은 비중이다.^{4,5} 남녀 임금격차는 OECD 평균의 2배 정도 된다.⁶ 소셜섹터는 이러한 과제에 맞서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지난 15년 동안 비영리단체의 수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현재 약 33,600개의 단체가 있다.⁷

신뢰 회복을 위한 규제적 감독 강화

관련 스캔들은 소셜섹터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시켰다. DGI 2020에 의하면,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은 SDO들을 가장 신뢰하지 않는 국가에 속한다. 신뢰 결여로 인하여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법적 및 제도적 개혁이 촉발되었고, 정부가 해당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몇 년 동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되면서 그로 인한 변화는 소셜섹터에 영향을 미쳤다.⁸ 그 예로 공익법인회계기준이 도입되어 정보공개 요건이 확대되었다. 2020년부터는 연 수입 최소 50억 원 또는

기부금 최소 20억 원인 비영리단체는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전에는 자산 100억 원 이상인 비영리단체만 외부감사를 받아야 했다. 정보공개 의무 대상이 확대되면서 모든 비영리단체(종교단체 제외)가 해당하게 되었다. 이전에는 자산 5억 원 이상, 연 수입 3억 원 이상인 단체들만 정해진 양식의 문서 등을 공개해야 했다.

더욱 최적화된 소셜섹터 관련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국 SDO의 77%는 관련법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응답했다.⁹ 또 SDO를 관할하는 정부부처는 43개에 달하고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은 최대 180일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오래 걸리는 시간이다. 비영리 섹터 관리를 위한 절차적/행정적 과정을 간소화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불충분하다.

자선사업감독위원회(charity commission)와 같은 단일창구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은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는 정부기관들 간의 논의와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부에 대한 소득공제가 존재하지만 불충분하다. 개인기부의 소득공제율과 인정되는 기부금의 한도는 아시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¹⁰ 대부분의 한국 SDO들은 소득공제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세금혜택을 늘리면 기부 동력은 높아질 수 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유산기부를 장려하는 몇 안 되는 국가다.

한국의 SDO 종류

한국에는 크게 두 종류의 NGO(비정부기구)가 있다: 어드보커시 중심의 단체와 사회복지전달체계 중심의 단체다. 두 종류가 법적으로 구분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어드보커시 중심의 단체들은 NGO로, 사회복지단체들을 NPO(비영리단체)로 본다. 하지만 여전히 단체의 정의에 대한 혼란이 있기 때문에 비영리단체, 민간단체, 시민단체, 시민운동단체, 공익법인과 같은 용어들이 서로 교체되면서 사용되고 있다.¹⁾ NPO는 사회적 기업으로 등록할 수도 있다.

SDO는 등록되지 않은 기관으로 존재하거나 법인으로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 세금혜택과 재무혜택은 등록된 단체에만 해당된다.

상속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에 속하지만, 공익법인 또는 공익신택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가 면제되어 유산기부를 장려한다.

기업기부: 기업 필란트로피에서 공유가치창출(CSV)까지

한국에서 기업의 기부와 지원은 전통적으로 소셜섹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SDO 중 55%는 기업기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아시아 평균보다 높게 나왔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 비해 현 정부는 필란트로피를 덜 강조하고 일자리를 더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기부금 (단위: 100만원)

연도	개인기부	기업기부	총 기부
2014	7,717,848	4,906,292	12,624,140
2015	7,932,828	4,778,202	12,711,030
2016	8,221,315	4,647,156	12,868,471
2017	8,321,393	4,632,262	12,953,655

정부는 기업이 기부해야 한다는 부담은 덜 주고 대신 지속가능한 경영 방법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의 기부금’ 표는 기업 부문에서 감소하고 있는 기부율을 나타내고 있다(100만원 단위).²⁾

기업은 기부를 넘어 사회적 책임과 공유가치창출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기업들은 사회기여에 대한 접근법을 “하향식(top-down)”에서 “더블바텀라인(double bottom line)”과 같은 새로운 방법으로 바꿨다.³⁾ 전통적인 기업봉사활동이 사라지는 대신 수혜단체의 어드보커시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자발적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전통 비영리단체보다 사회적 기업과 소셜벤처에 대한 투자로

서서히 관심이 전환되고 있다. 일례로, 정부의 지원으로 설립된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이 있다.⁴⁾ 영리와 비영리 섹터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또 다른 예로 SK그룹이 주최한 2019 Social Value Connect(SOVAC)를 들 수 있다. SOVAC은 사회 가치창출을 위한 방법은 다양하고 여기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었다.⁵⁾

여러 정부기관들도 사회적 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⁶⁾ 한국은 아시아 최초로 사회적 기업의 인증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했다. 인증을 통해 해당 기업들은 조달 우대, 보조금, 대출금과 같은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⁷⁾

사회적 기업이 많아지면서 전통적인 소규모 SDO가 밀려나고 모금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SDO 중 전통적인 비영리단체의 비중이 2007년 47.1%에서 2017년 23.7%로 감소한 반면, 사회적 기업의 비율은 같은 기간 43.1%에서 62.2%로 증가했다.⁸⁾

새로운 형태의 기부 및 트렌드

경제가 침체되면서 기부시장의 성장도 부진해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소셜섹터에서 일어난 스캔들은 “기부 포비아(giving phobia)”로

¹⁾ (따로 인용 정보가 있지 않은 한) 대부분의 통계는 World Bank 또는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자료이다

²⁾ 통계청. (2019). 비영리법인 법인세 신고 현황. https://stats.nts.go.kr/national/major_detail.asp?year=2019&catecode=A08039

³⁾ World Bank. (2018). 1인당 GDP, PPP.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PCAP.PP.CD?locations=KR>

⁴⁾ Steger, I. (2017). South Korea is aging faster than any other developed country. Quartz. <https://qz.com/1066613/south-korea-demographic-timebomb-its-aging-faster-than-any-other-developed-country-with-lowest-birth-rate-of-oecd-countries/>

⁵⁾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18). OECD Economic Surveys: Korea. <http://www.oecd.org/economy/koreaeconomic-snapshot/>

⁶⁾ Ibid.

⁷⁾ 통계청. (2019). 비영리법인 법인세 신고 현황. https://stats.nts.go.kr/national/major_detail.asp?year=2019&catecode=A08039

⁸⁾ 서울NPO센터. (2020). 2020 달라진 개정 세법 : 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외 무엇이 있나? <http://blog.naver.com/snpocenter/221872148244>

⁹⁾ 다른 자료가 명시되지 않은 한, 본 보고서에서 언급하는 SDO 설문조사 자료는 DGI 2020를 의미한다.

¹⁰⁾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00만원까지는 15%이고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이다.

¹¹⁾ Centre for Asian Philanthropy and Society (CAPS) 보고서 (2016).

¹²⁾ 통계청. (2019). 접대비·기부금 신고 현황. https://stats.nts.go.kr/national/major_detail.asp?year=2019&catecode=A08047

¹³⁾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접근방식이다.

¹⁴⁾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한국 최초의 사회적금융 도매기금으로 “사회적경제의 발전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필요한 금융기반을 만들고자” 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www.svsfund.org에 있다.

¹⁵⁾ 2019년 5월 28일 서울에서 개최한 행사로 사회적 기업, 정부, 학계, 비영리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경험을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더 자세한 사항은 <https://www.socialvalueconnect.com>에 있다.

¹⁶⁾ Centre for Asian Philanthropy and Society (CAPS). (2019). Business for Good: Maximizing the Value of Social Enterprises in Asia. <http://caps.org/our-research/business-for-good/>

¹⁷⁾ 사회적기업육성법 (2007). 법률 제8217호.

¹⁸⁾ 한승희. (2019). 소셜 비즈니스 생태계서 밀려난 ‘비영리 조직’... “우리 ‘영리’해도 될까?”, 더 나은미래. <http://futurechosun.com/archives/41524>

이어지고 있다. DGI 2020 설문조사에서 SDO 76%가 스캔들에 따른 기부의 감소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가 전통방식에서 온라인 기부와 모바일 모금 플랫폼으로 전환되고 있다. DGI 2020 응답 단체 중 1/4이 현재까지 크라우드펀딩에 동참했다고 답했고 절반은 앞으로도 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에 대하여 변하고 있는 태도와 대중의 세대교체로 인해 전통적인 기부방법 및 대상(현금, 복지중심)에서 새로운 형태의 모금(크라우드펀딩,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상자를 직접적으로 후원, 지속가능한 물품 또는 자산물품 구입)으로 바뀌고 있다. 이로 인해 변하는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는 단체는 모금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동시에 규제 인프라도 새로운 형태의 기부에 발맞춰 구축되고 있지 않아 시스템이 남용되고 섹터 내 비리가 지속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SDO는 불확실하지만 암울하지만은 않은 미래를 마주하고 있다. 소셜섹터에서 정부조달이 증가하고 있어 SDO의 역할이 확장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SDO들은 점차 정부의 역할을 대행하는 기관으로 바뀔 수도 있다. 더욱이, 더 많은 SDO들이 생존을 위해 전통적 비영리단체에서 하이브리드 형태의 사회적 기업으로 변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몇 년 사이 한국사회 내 소셜섹터의 지위가 어떻게 바뀔지 지켜봐야 한다.

한국 소셜섹터의 간략한 역사

한국은 1945년 일본의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이후 공식적인 정부가 부재하면서 사회운동이 발전하게 됐다. 농부를 비롯한 사회 소외계층이 전국농민조합총연맹이라는 단체로 모였고 1946년 회원 수는 300만 명이 되었다. 이 시기 서비스 중심의 종교단체와 자선단체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이승만 정권(1948-1960년) 아래 대의원조를 받는 서비스단체들은 복지활동을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은 박정희 대통령(1963-1979)의 개발중심 정책으로 한국의 생활수준이 올라갔다. 중산층이 많아지면서 새마을운동과 같이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단체들이 발전하고 도시화와 지역 농민사회가 발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들은 중앙정부의 정책과 계획을 풀뿌리 차원에서 적용했다. 전두환의 군사정권(1980-1988) 아래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사회경제적 다양화가 이뤄지면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을 위한 지원이 많아졌다. 단체들은 지속적인 시위와 항의로 전두환 정권이 물러날 때까지 이러한 집회를 주도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

40년의 독재정권은 한국 시민사회가 어드보커시 중심으로 형성되도록 했다. 한국에 도전이 되는 점들도 있다. 많은 필란트로피스트와 기업들(전통적인 가족중심 대기업 포함)은 어드보커시 단체들을 경계한다. 이들은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지역 SDO와 협력하기를 주저하고 대신 민간재단을 설립하거나 정부와 협력한다. 이러한 불신은 양방향인 면이 있다. 부유층과 기업이 군사 및 정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한국 일반 시민의 인식과 박근혜 前 대통령에 대한 대기업의 후원 스캔들은 이러한 불신을 악화시켰다.¹⁹

¹⁹ Jang, H. (2018). Old Money—The History of Giving in Asia. In Pragmatic Philanthropy (pp. 17-68). Singapore: Palgrave Macmillan.에서 발췌 편집

미주

¹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9). GDP, PPP (current international \$)—East Asia & Pacific, South Asia, Europe & Central Asia [데이터 파일].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MKTP.PP.CD?locations=Z4-8S-Z7>

² Giving USA. (2019). Giving USA 2019: The Annual Report on Philanthropy for the Year 2018. <https://givingusa.org/giving-usa-2019-americans-gave-427-71-billion-to-charity-in-2018-amid-complex-year-for-charitable-giving/> Bureau of Economic Analysis, US Department of Commerce. (2019.03.28). Gross Domestic Product, 4th quarter and annual 2018 (third estimate); Corporate Profits, 4th quarter and annual 2018 [신문기사]. <https://www.bea.gov/news/2019/grossdomestic-product-4th-quarter-and-annual-2018-thirdestimate-corporate-profits-4th>

³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2019). Development Aid at a Glance: Statistics by region (4. Asia). <http://www.oecd.org/dac/financing-sustainabledevelopment/development-finance-data/Asia-Development-Aid-at-a-Glance-2019.pdf>

⁴ Giving USA. (2019). Giving USA 2019: The Annual Report on Philanthropy for the Year 2018. <https://givingusa.org/giving-usa-2019-americans-gave-427-71-billion-to-charity-in-2018-amid-complex-year-for-charitable-giving/>

⁵ Bureau of Economic Analysis, US Department of Commerce. (2019.03.28). Gross Domestic Product, 4th quarter and annual 2018 (third estimate); Corporate Profits, 4th quarter and annual 2018 [신문기사]. <https://www.bea.gov/news/2019/grossdomestic-product-4th-quarter-and-annual-2018-thirdestimate-corporate-profits-4th>

⁶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ESCAP). (2019). Economic and Social Survey of Asia and the Pacific: Ambitions beyond growth. United Nations.

⁷ Shapiro, R. A., Mirchandani, M., & Jang, H. (2018). Pragmatic Philanthropy: Asian Charity Explained. London: Palgrave Macmillan

CAPS is a uniquely Asian, independent, action-oriented research and advisory organization committed to maximizing private resources for doing good. We do this by generating evidence-based insights into how individuals, companies, and governments can best address social challenges.

© 2020 Centre for Asian Philanthropy and Socie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on recycled paper"



Website: caps.org

LinkedIn: [linkedin.com/company/capsasia](https://www.linkedin.com/company/capsasia)

Twitter: [caps_asia](https://twitter.com/caps_asia)

Facebook: [facebook.com/capsasia](https://www.facebook.com/capsasia)

Instagram: [capsasia](https://www.instagram.com/capsasia)

Newsletter: bit.ly/caps-wdg